

중동 불안·美 금리인상 전망… 금 값 내려도 달러값 오른다

‘안전자산’ 달러 1년새 최고수준
금값 연초 역대최고 대비 23%↓
“국제유가 오름세, 강달러 지속”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다. ‘중동사태’에 기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도 뚜렷해지며 달러 수요를 끌어 올려서다. 달러가 금을 비롯한 다른 안전자산을 앞지르는 가운데, 달러값도 최근 1년새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22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를 산정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장 마감 당시 달러인덱스는 101.0로 집계됐다. 지난 52주(1년) 간의 최저치인 95.6과 비교해 약 5.6% 높고, 지난 6월 24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인 101.8과의 차이는 0.8%에 그쳤다.

달러인덱스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달러의 강세, 낮을수록 달러의 약세를 나타낸다. 지난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출범 당시 약 108 수준이었던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같은해 6월 약 96까지 하락했고, 이후 97~98 수준에서 횡보를 지속했다.

지난달 말부터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값이 급등한 것은 ‘중동사태’로 촉발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확산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는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값이 오른다. 특히 중동

사태로 원유를 비롯해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러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6월 초 미국과 이란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종전에 근접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다시금 교전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이란의 영향력이 큰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의 봉쇄를 시도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된 상황이다.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에도 주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金) 가격은 약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8월물 국제 금 선물 종가는 1트로 이온스당 4076.40달러다. 전일보다 1.51% 올랐지만, 지난 1월 말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5318.40달러와 비교해선 23.3%나 하락했다.

달러가 다른 안전자산과 비교해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어서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지만, 달러는 국제-예금 등을 통해 이자가 붙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 가격을 끌어올린다.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한 차례(25bps, 1bp=0.01%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87%로 전망한다. 두 차례 이상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49.7%에 달한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고, 일자리 지표 등 경제 지표도 양호하다는 분석에서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중동사태가 단기간 내에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달러의 강세 요인도 여전해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즉각적인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물류 차질 가능성이 한층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기 협상 기대가 약화됐다”라며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속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대체 관세 부과 예고 소식까지 더해지며 달러 강세폭이 확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대출 우대금리 조건에 체크카드 실적 인정

은행 금리감면 조건 안내 강화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 개선

은행 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으로 요구되는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이 간소화된 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하고,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은 은행별 4~8개에서 1개 안팎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금리감면 조건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 약정 과정에서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간과 선결제·결제 취소 처리 방식, 가족카드 합산 여부 등이 은행마다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돼 왔다.

실제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했다는 이유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카드사의 실

적 산정 기간과 은행의 금리감면 실적 산정 기간이 다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 약정서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이용금액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카드 결제 취소와 선결제 처리 방식, 가족카드 합산 기준, 결제일 변경 시 실적 인정 방식 등도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우대금리 조건을 정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을 은행별로 4~8개기량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 은행별 1개 안팎만 실적에서 제외한다. 체크카드 이용액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카드 종류에 따른 금리감면 수준의 차이도 없애기로 했다.

카드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실적으로 반영된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현재는 결제한 달에만 360만원이 실적으로 잡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실적으로 인정된다.

개선안은 은행별 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일은 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농협은행 10월 1일, 기업은행 9월 30일, SC제일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전산체계 정비 상황에 따라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관련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론 줄고 현금서비스·리볼빙 증가

금융당국, 카드론 규제 강화 기조
‘경기 불황’ 급전수요 타 상품 이동

카드론 증가세가 한달 만에 꺾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다. 반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잔액은 증가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여전한 급전 수요가 다른 대출성 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093억원으로 집계됐다.

43조원을 넘어섰던 전달 대비 3441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앞서 카드론은 지난 4월을 제외하고 올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영향이 맞물려 최대치(43조2534억원)를 기록했다.

카드론이 한 달 사이 감소세로 전환한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카드론 규제 강화 기조가 꼽힌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카드론 관리 주면에 따라 카드론 마케팅을 제한하고, 신규 취급 규모를 축소하면서 증가세를 역전해 왔다.

문제는 카드론 잔액이 줄어든 대신 현금서비스 잔액과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달 6조7842억원으로 전달(6조5038억원) 대비 2804억원 증가했다.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같은 기간 322억원 오른 6조832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올해 2~5월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맞물리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서비스 잔액 증감액은 지난 2월 -804억원, 3월 +2687억원, 4월 -915억원, 5월 +3073억원, 6월 +2804억원 등이다.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급전 수요가 여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건설사 전반적 매출 감소… 수주는 회복세

2분기 실적 오늘부터 순차적 공개
현대건설, 매출·영업익 동반 감소
신규수주 19조, 연간목표 68% 달성
대우건설, 영업익 1500억 2배 급증
현대산업개발, 매출 줄고 영업익 늘어

건설경기 회복이 지체되면서 올해 2분기에도 건설사 외형은 역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해외 원전 수주도 아직은 기대감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수혜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원가율 안정과 함께 선별 수주 등 내실 다지기로 수익성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3일 IPARK현대산업개발과 삼성E&A를 시작으로 29일 삼성물산, 31일 현대건설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영업이익은 건설사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7810억원, 2005억원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2.2%, 7.6%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 원가율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사의 준공 임박 프로젝트에서 원가 정산을 마무리하면서 당초 우려보다는 선방했다.

수주는 눈에 띄게 회복됐다. 신규수주는 1분기 4조원에 못 미쳤던 것과 달리 2분기에만 19조원의 수주가 집중됐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2분기 미국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5조4000억원)와 북경역세권 복합개발(3조원),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스탄 가스처리시설(2조4000억원) 등을 수주해 연간 수주 가이던스의 68%를 달성했다”며 “하반기는 원전 수주가 재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우건설은 매출 2조269억원으로 10.8% 감소하지만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1500억



주요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이 23일부터 발표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원으로 예상됐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간 영업손익은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2023년 4분기부터 시작된 미분양 주택 대손 반영과 2025년 4분기 박배스(부실·손실을 한꺼번에 반영)를 고려할 경우 올해 영업손익 변동성은 과거 대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9790억원, 영업이익 1204억원이다. 매출은 15.8% 줄지만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수준이다.

GS건설은 2분기 매출 2조7700억원, 영업이익 1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분양이 줄면서 외형 축소가 불가피했고, 작년 2분기 대형 현장 정산과 도급 금액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DL이앤씨 역시 매출 1조7389억원, 영업이익 1201억원으로 각각 12.7%, 4.8%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는 않다. 착공 감소로 사업기반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전쟁 여파로 공사원가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23년 이후 건설수주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착공면적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원활한 착공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